

연금연구회 6차 세미나

“국민연금 다함께 살리기”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

2024. 9. 24(화)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

연금연구회

모시는 글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께.

초대 인사혁신처장 이근면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연금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 방향의 필요성,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그리고 복지와 연금의 역할 구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안 마련을 촉구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세대 간,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의견 개진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며, 함께 최선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연금개혁의 성공적 추진은 우리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연금연구회 고문 이근면

연금연구회 6차 세미나

사회: 김찬혁 연금연구회 청년세대

세미나 1부

- 좌장: 김학주 동국대 교수
-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 최근 연금개혁안 논의에 대한 연금연구회 입장문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사람들연구소 이사장)
 -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한 원칙들 - 숫자 개혁이 아닌 진짜 개혁 -
- 전영준 한양대 교수
 -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에 따른 미적립부채 규모 추계
- 박명호 홍익대 교수
 - 국가부채와 연금개혁
- 김재현 상명대 교수
 - 퇴직연금제도 충실화를 위한 기금형 전면 도입

세미나 2부

주제발표 및 토론

- 좌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주제 발표>

- 연금연구회 청년세대 김규찬
 - 청년층이 바라는 연금개혁 방향
-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 100세시대 노후 소득 방안: 활기찬 노후를 위한 고령 근로 활성화
를 중심으로
-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 국민연금 지급보장과 정보 공개에 대하여

<지정 토론>

- 바른청년연합 이재영 기획국장
 - 청년세대, 국가의 천덕꾸러기이자 국가의 미래
- 연금연구회 청년세대 김찬혁
 - 대한민국의 부모님을 무책임한 부모로 만들려는 연금개혁

세미나 1부

최근 연금개혁안 논의에 대한 연금연구회 입장문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에 대하여 정치권을 비롯하여 학계와 관련 시민단체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즈음하여 연금연구회는 오늘(9월 24일) 토론회를 개최하며 아울러 정부개혁안을 중심으로 연구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중심의 연금개혁논의가 얼마나 부실했으며 무책임하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수치는 비밀에 부쳐졌었고, 신성한 속의민주주의는 왜곡된 정보의 제공, 석연치 않은 의제선정 및 대표단 구성 과정 등으로 인해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개혁 결과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회세력과 정치집단들이 개혁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해 옴으로 인해 오히려 연금전문가들이 논의과정에서 배제당하고 심지어 어처구니없는 매도를 당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연금 개혁의 성공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기본적인 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국민연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올바른 처방은 올바른 진단에 기반하며 올바른 진단은 현상의 정확한 파악에 기반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장의 비판이 두려워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숨기는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전문가집단의 합리적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특정 정파나 사회세력과 무관하며 오직 논리와 증거에 기반하여 연금을 공부해온 진정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모든 세대의 참여입니다. 지난 공론화위원회 운영 경험은 연금개혁 논의에 왜 수급세대와 후속세대 모두를 포함하는 모든 세대의 입장이 동등한 수준의 발언권을 가지고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 말로만 하는 세대간 연대가 아닌 진정한 세대 간 연대는 모든 세대의 동등한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정부 연금개혁안을 중심으로 연금연구회의 입장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연구회는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3대 원칙에 대해 원론적으로 지지를 밝힙니다.

연금연구회는 정부 연금개혁안의 세 가지 원칙인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호혜적이지 못하고 특정 세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는 결코 지속되지 못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유지 기능 역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 42%’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는 13%가 아닌 20.7%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낮은 출생율과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도가 높은 연금개혁이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신인구추계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예정대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막대한 규모의 미적립 부채(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대비 부족한 준비금으로 연금연구회 추산 1825조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9.7%를 걷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 42%-보험료 13%’는 재정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금제도의 수지균형 상태에서 ‘보험료 1% 포인트가 소득대체율 2% 포인트에 상응하는 등가성’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 42%의 수지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20.7%를 걷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막대한 규모의 미적립 부채(2023년 기준 1825조원, GDP 대비 81%)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도 추가적인 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 20.7%를 걷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정부개혁안에 담겨있는 재정안정 방안은 수익과 위험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안정방안인 ‘소득대체율 42%-보험료 13%’ 은 매년 7.7% 포인트 만큼의 보험료 부족분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적인 부채를 발생 시키게 됩니다. 재정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70년 동안의 재정평가기간 동안 매년 기금 운용 수익률을 1.0% 포인트 더 높이고, 연금 수급 이후 연금 지급액 연동방식 조정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32년까지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3년에 한 번씩은 마이너스 기금 운용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으며 매년 수익률을 1.0% 포인트 올리려면 더 자주 마이너스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특히,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환경, 특히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도 닥칠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유난히 원금 보장에 집착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난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공격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해외 연기금들은 단 1년 동안의 손실이 원금의 20~30%에 달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기금 운용수익율을 70년 동안 매년 달성한다는 계획은 일종의 ‘희망고문’ 또는 ‘신기루’ 에 불과합니다. 70년 동안의 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1% 포인트의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으나, 이는 국내외적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간과한 주장일 뿐입니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운영의 최대 위험 요인인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을 간과한 입장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보험료를 단 1% 포인트도 못 올린 배경에는 이처럼 극단적인 낙관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금의 근본이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낙관주의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놓쳐왔던 지금까지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넷째, 정부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의 순기능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첫 연금 확정 후의 연금액 연동방식(Indexation)을 조정하는 일본의 매크로 슬라이드 개념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대안 중에서 제일 빠른 자동안정장치 도입 시점이 2036년, 가장 늦은 시점은 2054년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를 당장 도입하는 것이 아닌 데도, 이를 비판하는 집단에서는 ‘자동깎기 장치’ 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미 OECD 회원국 70%가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를, 우리는 수지균형 괴리가 큰 점을 들어 시기상조라고 비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조정장치가 ‘자동삭감장치’ 가 아닌, ‘자동유지장치’ 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59세인 의무납입연령을 64세로 연장하면 소득대체율이 13% 늘어날 수 있어서입니다. 향후 10~30년의 기간 동안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를 도입하면, 청년층 신규고용과 고령층 계속 고용이 동시에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5년의 추가 근로 소득과 국민연금 추가 가입을 통해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삭감장치’ 프레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젊은층조차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여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자동조정장치의 순기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가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은 적절한 접근으로 보여 집니다.

세대간 갈라치기, 세대 구분의 자의성, 재정안정 효과의 불확실성 등의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 오랜 기간 청년세대 및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배려가 없어 왔음을 감안할 때, 최소한 앞선 세대의 자기반성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제안입니다.

여섯 번째, 기초연금의 단계적 40만 원 인상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저소득 노인층의 급여를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70%의 노인 전체의 급여를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OECD는 우리 기초연금이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가 적음” 가성비 낮은 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노인과 빈곤하지 않은 노인이 동일한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OECD는 지속적으로 제도운영 개선을 권고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평균액이 65만원 안팎 정도인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부부기준으로 20% 감액 조치가 있어도 64만원 수준이 되어, 중하위 소득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확대를

권장하는 셈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저소득 노인층의 급여를 인상하는 한편, 기초연금이 본연의 목적인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곱 번째, ‘59세인 의무납입연령의 64세로 5세 연장’ 을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연금 문제는 이중적이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동시 개혁을 통해 정부가 언급한 ‘의무납입연령의 64세로 5세 연장’ 을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의무납입연령의 5년 연장은 소득대체율 13% 인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덟 번째, 지급보장은 선언적 문구가 아닌 현실적 제도 개혁을 통해 가능합니다.

앞선 세대로서 책임도 지지 못할 지급보장 도입은 너무도 무책임해 보입니다. 제도가 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지급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일본과 캐나다처럼 100년, 150년 튼튼 연금을 구축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지급보장입니다. 자칫 지급보장 조항 도입이 연금개혁 노력을 소홀히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연금연구회는 단지 선언 상의 지급보장 명문화의 실효성과 부정적인 파급효과 측면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형식적인 문구 하나 넣는 지급보장이 결과적으로는 미래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를 더 힘들게 할 것이 자명해서입니다. 또한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연금부채총당금 추계가 의무화되고 연금부채총당금을 포함한 정부부채 D4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연금연구회의 추계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연금부채가 GDP의 81%에 달합니다. 연금부채총당금의 추계가 공식화됨으로써 연금재정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부부채의 증가에 따라 대외신인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부탁드립니다. 연금연구회가 바라는 연금개혁에 임하는 자세는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비판과 대안 제시입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완벽할 수 없으며 ‘세대 간 갈라치기’, ‘자동안정장치는 연금삭감장치’ 등의 비판들이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세대 또는 집단의 이익에 치우

치지 않는 그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연금개혁의 시작은 대중 선동을 위한 구호가 아닌 현실에 대한 차분한 분석과 이에 기반한 합리적 미래 추정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연금개혁에 관한 어떤 방법과 대안에도 진지한 자세로 분석하고 의견을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4년 9월 24일

연금연구회 회원 일동

※ 다음 페이지 <참고>에 연금연구회 청년세대 입장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부 록 >

연금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개혁을 촉구합니다.

연금연구회 청년세대

2024년 9월 4일 발표된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혁안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수의 청년들은 현 국민연금 자체가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 느끼지 못하며,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문제보단 오랜 시간문제가 방치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무한히 늘어날 수 없는데, 조금 내고 더 받는 것의 비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왔습니다. 고령화·저출생이 예측되고 있으며 수치로 나타날 때에도 비율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늘어나면 고령화·저출산 사회에서 내는 돈(보험료율)을 더 늘려도 지속 불가능하여 결국 세금까지 투입하고, 결국 이는 국민연금 제도에 더 큰 불신을 갖게 될 것이며, 다음 세대가 느끼는 사회제도에 대한 안전성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경제는 무한으로 성장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 수익률로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둘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존 고령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청년세대가 나중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노력이 부족하며, 이는 청년들이 결국 고령층을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저출생의 문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미래에 받아야 할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청년세대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셋째, 재정 불안정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입니다. 연금 개혁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청년들이 이 제도 아래에서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지속가능성은 세대 간 공정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확보됩니다. 장기적인 경제 상

황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연금 재정이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9월 4일 발표된 연금 개혁안은 청년세대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래의 혜택이 불확실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저출생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는 반면, 안정적이고 공정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금제도는 모든 세대에게 공정하게 작용해야 하며, 특정 세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는 연금 자체에 대한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청년세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공론의 장을 열어주시시오. 정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연금연구회 청년세대 일동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한 원칙들 - 숫자 개혁이 아닌 진짜 개혁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사람들연구소 이사장)

[연금개혁의 본질]

연금개혁의 본질은 기금의 고갈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어 2055년이 되면 연금 고갈로 인해 미래세대가 받을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애초에 설계 당시 일찍 가입하고 일찍 수령한 가입자에게만 유리하게 셋팅되었기에 기득권자들이 연금을 과도하게 수령하여 미래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니 개혁하자는 것인데, 갑자기 현세대의 노후 보장을 문제 삼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온갖 걸가지를 다 끌어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섞어찌개 논점 흐리기]

노후 보장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문제이고 사회적 여력과 상급부조적 의미로 국민 모두의 연금이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를 돕는 국가적 시스템이다. 또한 그것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한해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다. 이미 기초연금을 하위 70%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기초연금 역시 금액을 올리자고 한다. 금액을 상향시키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그것은 누가 부담하는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다.

명목만 다를 뿐 미래 세대가 내는 세금은 더 늘어나니 실질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다 문제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개혁할 수는 없다. 이 문제점을 한 번에 다 들고 일어서면 그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이 늘어나고 개혁은 더 큰 진통이 따르게 된다. 퇴직 연령의 연장은 찬성한다. 건강한 수명이 늘고 전체 인구가 줄고 있으니 퇴직 연령을 연장해서 국민 스스로 더 일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노후 빈곤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레토릭에 그칠 수 있다. 원샷원킬은 힘들다. 문제의 본질 해결 후 차근차근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

[연금개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여기서 중요한 건 기득권 제한이다. 기득권 제한이 우선 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연금 개혁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

첫째,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

둘째, 노후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국가적인 방안을 연구

셋째, 소외 계층에 대한 국가적 부조를 생각. 국민연금 문제점의 본질인 기금의 고갈 해결이 우선이다.

[기금고갈의 원인]

첫째, 기대수명 증가. 지나친 고령화로 수급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

둘째, 수익비 설계 오류. 설계 당시 수익비를 너무 높게 책정해 기득권자들이 이미 너무 많이 받았고 이것에 대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경쟁력의 의사 미반영. 보험료를 올리면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는데 기업의 경쟁력과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건 부당하다.

이걸 다 섞어찌개 해놓고 해결하자는 건 논란의 여지만 남길 뿐이다. 유례 없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받을 사람은 늘고 낼 사람은 줄어 기금 고갈이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니 이것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을 살려 미래 세대가 받으려면 기득권의 양보가 필요하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자동안정장치도 찬성한다. 그때그때 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넣자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나 어떻게 넣느냐는 다른 이야기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 상태를 전 국민이 알아야 하고 고작 6~7년 늦추는 말뿐인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 함께 죽는 것이니 말이다. 올바른 연금개혁이 시행되지 않으면 아마 국민연금 폐지론이 나올 것이다. 안 내고 안 받겠다는 미래 세대가 많아질 것이고 결국 국민연금 폐지론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중요한 건 늦더라도 차근차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연금 개혁 성공을 위한 주요 과제]

첫째,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수급권자 제한이 필수.

둘째, 좀 더 늦게 일하고 오래 내기.

셋째, 수명 증가분 정도를 감액 지급 하자.

넷째, 쉬운 세금 투입은 미래 세대에게 재앙이다.

마지막, 서두르지 말되 반드시 해내자. 이를 위해서는 청년 가처분 소득과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 정년 연장, 고연금자 상호 부조적 기여 등을 고려 해야 한다

[연금개혁의 순서]

첫째, 연금 지속성 확보.

둘째, 4대 연금 개선.

셋째, 노인빈곤 대안 모색의 방향으로 차근차근 종합적 사회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성공적 개혁을 위한 순서와 방향]

정부, 여, 야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태도와 사전 합의가 필수적이다.

첫째, 한다 (언제) 까지

둘째, 고통은 전 세대가 분담한다. 선 기득권 제한, 후 조치할 수 있는 기금 방안 모두 강구, 마지막으로 인상율 결정 (기업 동의 필수 / 절반 부담)

셋째, 지속적 안정화를 위한 장치 도입 (말장난하는 세금은 안 된다. 결국 미래 세대 부담이다.)

여기서부터 PDF로 되어 있는 PPT 파일 세 개가 다음 순서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

-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에 따른 미적립부채 규모 추계

- **박명호 홍익대 교수**

- 국가부채와 연금개혁

- **김재현 상명대 교수**

- 퇴직연금제도 충실화를 위한 기금형 전면 도입

세미나 2부

청년층이 바라는 연금개혁 방향

연금연구회 청년세대 김규찬

안녕하십니까 연금연구회의 김규찬입니다.

먼저, 연금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내외부 관계자, 언론 관계자, 그리고 연금연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년 세대를 대표하여, 우리 세대가 바라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속에서 중요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층이 바라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틀을 바꿔, 장기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지만, 명쾌한 해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개혁을 주도한 정권은 다음 선거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개혁 안건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의 경우, 세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이 30여 년 후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여러 세대와 계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청년세대는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세대 갈등으로 인하여 연금개혁은 진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의 가장 큰 적은 정치적 민감성입니다. 정권이 몇번이고 교체될 동안, 정부는 연금개혁이라는 폭탄을 다음 정권들로 미뤘습니다. 연금개혁이 긴 시간동안 교착상태일 수 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연금개혁은 꼭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정부의 연금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 합니다. 2055년에 65세인 1990년생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지 못 할것이 기정 사실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청년들 사이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금은 손해 보는 장사이니 연금제도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은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당장의 생활유지에 집중할 수 밖에 없으며,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 대한 여유가 점차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 청년들이 미래에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지고 있어,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시각도 솔직하게 존재합니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청년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늦게전에 제대로된, 청년세대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해야합니다.

사실, 연금문제의 또 다른 요인이 저출산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해결되더라도 연금제도의 수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연금 잔고는 바닥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출산율을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연금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024년 9월 4일, 정부는 “미래를 위한 상생의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장기 재정 안정성 제고와 미래세대 수용성 확대를 내세우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의 거시적인 방향성 자체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소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재정적 측면의 아쉬움도 있지만, 세대간 차별 유발 정책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아주 기본적인 과제인 보험료 인상의 관철마저 흐릿하게 만들고 있는 정치적인 개혁안이기 때문입니다.

첫번째로, 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것입니다. 연금개혁의 최우선적 과제는 보험료 수입 확보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아주 기본적인 과제인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둘째, 기금수익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기금 운용 수익율을 높일 수 있다면 재정안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금수익율은 현재 통제가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기금 운용을 통한 투자 수익율을 올린다는 것은 투자 리스크도 동시에 커진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격적인 운용전략으로 기금수익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투자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므로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안정장치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 연금개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뽑히는 자동안정장치는 인구, 경제, 재정적 통계지표의 변화에 따라 연금 제도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자동안정장치는 연금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청년 및 기성세대 간 갈등과 정치적 갈등을 우회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정치적인 이유로 연금 폭탄돌리기가 반복된 것은 매 모수, 구조개혁을 추진할때마다 반대 세력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개혁 추진의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자동안정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인구구조가 훨씬 좋은 OECD의 몇 개 국가에서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성공사례가 이미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동안정장치의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가지 정책은 당장의 세대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정책입니다. 또한, 추진한다해도 차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들입니다. 개혁은 경제와 정치의 조화가 필수적인데, 다음의 정책들은 경제와 정치, 두가지 모두가 결여되어 있는 사항들로, 정부와 국회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인상안입니다. 노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이며, 청년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기여금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인상할수록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이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매력과 신뢰도는 더욱 상실됩니다. 즉,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 국가 재정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소득 대체율 인상입니다. 이 또한 현재 노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청

년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노인소득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연금 잔고가 없어진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된 현재 상황에서 보험요율의 압도적 인상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특정 계층의 여론을 수용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메시지로 보이며,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개혁 동력을 더욱 상실시킵니다.

셋째,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급보장은 연금잔고 부족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세대 신뢰 확보를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고, 청년들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아닌, 잠재적인 국가채무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은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미루고, 청년들에게 연금제도가 국가채무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금개혁을 소홀히 할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든 세대에 공정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정책은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 추가하여, 앞으로 이러한 연금제도에 대한 계획을 추진코자 할 때, 전 세대를 아우를수있는, 특히, 청년세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투명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를 대표하여 기성세대 그리고 정부 및 국회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대한민국을 경제강국으로 만든, 민주화를 이끈 주역임을 잘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노후를 잘 보살펴야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청년들은 실제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 세대들이 닦친 현실을 조금 더 고려해주시기를 조심스레 바라는 바입니다.

높은 경제성장률로 가속하는 사회를 거쳐오며, 평생 직장이라는 고용 안정성을 누렸던 기성 세대와는 달리, 청년세대는 일자리를 찾는 것뿐만아니라, 값

비싼 집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도 심하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에 기여할 청년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미래 연금에 기여할 출산율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국익적 마인드로 건설한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차후 다음 세대에게도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들에게도 더 건설한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시한 폭탄과 같은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권과 다다음 정권까지 이 개혁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다시 한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맞닥뜨린 심각한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하는 것이지, 권력을 잡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금개혁 카드를 지금 꺼내든 이상, 정부와 국회는 특정 세대와 계층을 위한 개혁이 아닌, 국익 중심의 제대로된 개혁을 단행하는 발화점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금개혁으로 당장의 표심은 잃을 수 있겠지만, 후대와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년 세대가 바라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연금 개혁은 숫자와 재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세대간 갈등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한 청년세대는 이번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정으로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청년 세대의 시각과 바람이 연금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시대 노후 소득 방안:
활기찬 노후를 위한 고령 근로 활성화를 중심으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배우며 벌며 사는 노령사회 구축, “배벌사”
6070+ 연륜과 경험, 고용유연성 통한 경제적 수명 연장시켜야

배벌사, Tap the untapped Senior Workforce!

정부와 기업에 경종을 울리는 “배우며 벌며 사는 노령사회를 만들자” 는
KARP대한은퇴자협회 Wake-Up Call입니다.

배우며 벌며 사는 노령사회 구축 캠페인은 대한은퇴자협회가 2020년 대선
정책 대안으로 양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정책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공식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말 초노령사회로 들어섭니다. 65세 인구가 20%가 넘는
늙어버린 나라가 됩니다, 더욱이 30년 이상 계속된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는
급감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심각한 노령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6070+ 노년층은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며
변화시켜 왔습니다. 늘어나는 6070+ 인구를 경제주체로 받아들여 재활용해야
할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수록 많은 사람들은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사회는 불안정한 노후 소득으로 더욱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KARP 자체 회원조사에 의하면 506070+ 76%가 일하고자 하며,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청년층이 찾는 그런 대단한 일자리가 아닌 생활이
될 수 있는 생계형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표준생활이 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일 자리를 찾는 대부분의 506070+세대는 노후 준비가 안 된 가구주로서

화려한 직장이나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 생계비 수준인 100만 원~150만 원+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제일 큰 부분은 언제까지 정부가 최대 고용주로서 재정으로 만든 용돈 수준의 단기 노년 일자리로 갈 것이냐 입니다.

그 대안은 지역사회 내 민간기업과 연대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 인력에 대한 훈련과 기업 지원으로 일자리를 만들며 기업 활동을 장려해 더 많이 일할 곳을 개발해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일하겠다는 가구주들에게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은 6070+에 대해 너그럽지 않습니다.

기업은 나이 든 세대에 대해 아주 강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청년실업이란 표면적 이유로 정부도 이렇다 할 요구를 기업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은퇴협은 지난 20여 년 YOU, young old united 세대 상생, 세대 공존 캠페인을 벌여 왔음)

나으로 인해 연령차별이란 레이블을 달고 시간당 7~80명씩 쏟아져 나오는, 건강하고, 연륜과 경험으로 다져진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월 150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공적연금 수급액과 합쳐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빈곤선 130만 원을 겨우 넘을 뿐입니다.

여기서 저는 전 연령을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 정책(Inclusive Labor Policy)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장기적 인구 계획이 요구되고, 대량으로 밀려 나오고 있는 5060+베이비붐 세대의 “연령 포용 노동환경” 정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5060+세대가 배우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정년과

관계없이 기업이 원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유연한 고용환경에서 이직과 고용연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는 boomer 세대에게 청년층이 누리는 교육의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4~6세대(20대에서 70대까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생의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복지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연령차별을 방지하고, 여러 세대(다세대)가 일하는 연령 포용 직장 문화를 정착시켜 가야 한다.

506070+들은 건강합니다.

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높은 의지와 열정도 강합니다.

다시 강조해 한국의 장노년층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기꺼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은퇴 인력 재교육과 재직근로자 퇴직 준비 교육이 절실합니다. 가르쳐 일하게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즉, 재교육을 통한 인력 재활용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세대가 같이 일하는 연령 포용 일터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일터에서 젊은 인력의 보조 인력으로 참여케 하여 506070+세대들이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며 오랫동안 경제 활동에 참여토록 해줘야 합니다.

은퇴 인력 재교육, 재직근로자 퇴직 준비 교육을 통해 인력의 재활용으로 인구감소 시대의 경제 활동 근간으로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 고용은 연금 가입자로, 납세자로, 또 소비자로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주며, 노후 소득의 근간을 더욱 두텁게 해 줄 것입니다.

배벌사, 배우며 벌며 사는 사회는 초노령사회에 대처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한국의 5096070+에게 배우며 벌며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은 생애 희망의 지표를 열어주고 닦쳐온 노령화를 극복해 가기를 촉구합니다.

연금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옥동석(인천대학교 명예교수)

I.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희망고문일 뿐!

(1) 국민연금 적자는 어느 회계·기금에서 부담할 것인가?

- 국가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각각 독립채산적 운영을 하는데, 국민연금 적자보전에 특별회계·기금의 출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기금별 이해관계자 집단의 희생이 있어야 함.

<표 1> 재정지출의 회계·기금별 비중(2023년도 국회 확정예산 기준)

구분	금액(비중)	비고
재정지출	638.7조원(100.0)	
예산	441.1조원(69.0)	
일반회계	368.8조원(57.7)	1개
특별회계	72.3조원(11.3)	25개
기금	197.7조원(31.0)	68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p.24 참조.

(2) 국민연금 적자보전은 일반회계의 여타 지출항목들에 우선할 수 있는가?

- 일반회계의 주요 지출항목으로는 공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지원, 공공기관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지출, 그리고 사적 계약에 근거한 인건비(고용계약), 매입채무(조달계약) 등이 대부분임(<표 2> 참조).
- 국민연금 적자보전은 기존의 공법상 지출(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원, 복지 지출), 그리고 사적 계약에 근거한 인건비와 매입채무에 우선할 수 있을까?
 - 국민연금 지급보증은 국방, 외교 및 각종 정부행정을 위한 지출, 공법과 사적계약에 근거한 정부의 지출의무에 우선할 수 있을 것인가?

<표 2> 일반회계의 주요 지출항목들(2024년도 행정부 예산안 기준)

지출항목	금액(일반회계 총세출 대비 비중)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한 지방재정 지원	- 135.7조원(30.2%) ※ 지방교부세: 66.8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68.9조원
○ 군인, 국립대학, 군무원, 공무원 등 일반회계 인건비	- 40.2조원(8.9%)
○ 장애인·노인·청소년·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소득·의료·생활 등 맞춤형 보호지원	- 41.0조원(9.1%)
○ 기초생활보장 강화, 주거 취약계층 보호 등 소득·고용·주거 사회 안전망 구축	- 24.8조원(5.5%)
○ 기초연구 지원,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지원, 방위력 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 R&D 투자	- 25.4조원(5.6%)
○ 예비비	- 5.0조원(1.1%)
○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25개 특별회계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36개 기금사업 지원	- 91.6조원(20.4%)

주: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세출 총액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예산안 개요”, p.2 참조.

(3) 일반회계 자금부족시 국민연금 적자보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 일반회계 자금이 부족할 때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①조세 증가, ②국채 발행, ③중앙은행 차입이 있는데, 조세 증가 외에는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하여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조세 증가(①)는 국민들의 조세저항뿐만 아니라 경기에 부정적 영향.
- 중앙은행 차입(③)은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를 포함하는데, 사실상 통화증발을 의미함.
-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2022년도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국민연금·사학연금·건강보험이 독립채산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160%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함.

□ 국민연금 지급보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서 정치적으로 적자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정치권은 통화증발로(중앙은행 차입) 초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밖에 없음.

- 국민연금 적자가 예견될 때에는 정치권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급여와 보험료를 미리 조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
- 국민연금 지급불능 시에는 사회계약의 근간(린치핀)이 해체되어 국가적

분열(‘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야기할 것임.

(4)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군인연금에는 왜 지급보증이 있는가?

- 국민연금 지급보증이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한다면, 왜 공무원·군인연금에서는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며 사실상 지급보증하고 있는가?
- 공무원·군인연금은 일반 국민들이 가입하는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세 가지 성격이 융합된 형태인데, 정부는 공무원·군인연금 도입 초기부터 퇴직금(㉠) 부분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음.
 - 일반 국민의 경우 퇴직금(㉠)은 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정부에 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됨.
 - 정부는 공무원, 군인의 고용주로서 퇴직금(㉠) 성격의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
- 공무원·군인연금의 퇴직금(㉠) 성격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급보증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연금(㉡) 성격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보장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무원·군인연금의 국민연금(㉡) 성격 부분에 대해 지급보증을 배제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전 국민과 함께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 ※ 공무원·군인연금을 성격별로(㉠, ㉡, ㉢) 구분회계할 필요

(5) 결국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한다고 하여,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의 변경에 대한 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이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함.
 - 또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 개정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정치권이 통화증발로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면,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6) ‘그 누구도 국민연금을 지급보장할 수 없다’ 는 국민적 인식이 중요할 뿐!

- ‘국민연금 지급보증’ 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뿐이며, 이는 ①지속적인 경제성장(국부의 증진), ②안정적인 국가신인도(대외적 신용도), ③보험료·급여 수준의 지속적 조정에 대한 유연한 국민적 합의에 좌우됨.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급여의 유연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 ‘국민연금 지급보증’ 명문화는 국민들에게 국가 공동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인식을 소홀하게 함(희망고문).
 - 국가는 국민 개개인과 별도로 존재하는 구분된 인격체가 아니고 개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이기에, 국가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개개인의 성찰과 헌신이 중요함.

Ⅱ.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과 ‘국가재정 장기재정전망’ 을 통합하고, 자세한 데이터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제를 마련하라.

(1) 연금개혁은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재정의 문제이다.

- 경제정책의 세 가지 목표는 ①자원배분의 효율성(경제성장), ②소득분배의 공정성, ③경제안정화인데,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 수준 그리고 연금기금은 세 가지 정책목표 전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
 - 국민연금은 자원배분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통해, 소득분배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 일부로서, 그리고 경제안정화 측면에서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통해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국가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해 분야별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국민연금은 그 규모가 크긴 하지만 정부기능 12개 분야에서 복지의 일부임.

<표 3> 2023년 분야별 자원배분(조원, %)

구분	금액(비중)	구분	금액(비중)
1. 보건·복지·고용	226.0(35.4)	7. SOC	25.0(3.9)
2. 교육	96.3(15.1)	8. 농림·수산·식품	24.4(3.8)
3. 문화·체육·관광	8.6(1.3)	9. 국방	57.0(8.9)
4. 환경	12.2(1.3)	10. 외교·통일	6.4(1.0)
5. R&D	31.1(4.9)	11. 공공질서·안전	22.9(3.6)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0(4.1)	12. 일반·지방행정	112.2(17.6)
-	-	합계(총지출)	638.7(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p.41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과 ‘국가재정 장기재정전망’ 을 통합하여 발간함으로써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복지를 넘어 국가경제, 국가재정적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

(2)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이념이 아니라 숫자의 논쟁이어야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의 모든 데이터들이(파라미터, 가정, 국민경제적 영향 등) 투명하게 공개되어 대학, 초중등 학교에서도 충분히 토론 논의될 수 있어야 함.
- “(수치를) 계산하는 노력을 통해 정당들은 그들의 정치적 프로그램과 최종 제안을 명확하게 한다. ... 정치 프로그램의 내용은 모호한 약속들로 구성될 수 없다. ... 과격한 정치는 잡초처럼 뽑혀 없어진다. ... 정치적 논의는 계산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문명화한다.” 1)

1) Liedekerke, L. van, “The views of the political parties,” in Graafland, J. J. and A.P. Ros (eds.), *Economic Assessment of Election Programmes: Does it Make Sense?*, 2003,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Boston, p. 138.

청년세대, 국가의 천덕꾸러기이자 국가의 미래

바른청년연합 이재영 기획국장

2024년 4월, KBS를 통해 방송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공개토론 방송은 소득보장론에 기울어진 시민대표 비율이 높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에서는 이번 공론화 기획이 가진 청년을 향한 빼뚫어진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공론화 위원회의 기획은 당연히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더욱 심각한 점은 청년층을 향한 혐오적 시선이다. 숙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시작한 공론화 위원회에서 1천만명에 달하는 2030인구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여러분은 평생 잔고관리도 못하고 대출에 허덕이고 살건데, 연금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도다. 청년층을 저축도 못하는 잠재적 폐지 노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영상 속에 최태성 강사가 등장해 하는 대사는 기가 막히다. “실제 우리(청년세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생이 카드로 막고 대출로 당기고 담보로 끌고 플러스 잔고 보기 힘들잖아요. 세월이 흘러 은퇴가 눈앞에 보이는 시기가 되면 아차 싶지만 그때부터 부랴부랴 준비하긴 아이고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게다가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4만 2천여명의 빈곤 노인을 청년세대의 미래로 가정한다. “폐지를 좁는 65세 이상 노인만 전국 4만 2천명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국민연금은 이런 노인 빈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상의 내러티브에 따라 청년들은 폐지를 주워야 하는 미래의 자신을 걱정하며 상상하게 된다. 청년들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이런 시선은,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돌보기 보다, 가난해질까 두려워하며 국가에 의존하길 바라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 정책은 긴급 복지가 필요한 4만명이 아니라 나머지 수백만명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림 1 유튜브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https://www.youtube.com/watch?v=XX5sKEx3DOM>



그림 2 유튜브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https://www.youtube.com/watch?v=XX5sKEx3DOM>

연금 기금이 없애는 국회 안이 세대갈등과 저출산 만든다.

세대 갈등은 더 내고 더 받자는 국회안이 만든다. 산업화 세대가 애써서 만든 기금이 곧 없어진다는데, 죄책감은 모두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서 일한 노년세대가 져야한다. 청년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나 자문해야 하는 상황은 누가 만들었나? 지금 청년 세대가 받을 연금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야한다. 자녀세대로부터 월급의 절반을 걷어야 할지도 모른다. 2055년부터는 들어오는 족족 지급되어 나간다. 이러니 아이 낳고 싶지 않은 게 정상이다.

한 세대만 지나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세대갈등이 대한민국 사회에 잠재할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만 가능할 것이다.

소득보장론, 급진적인 재분배 이데올로기 실현할 찬스

결론적으로, 마땅히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소득보장론자의 GDP를 나누면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연금을 주기’ 위한다는 구실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구속할 수 있다. GDP를 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지는 말이 없다. 법인세, 상속세, 각종 거래세 어떤 식으로든 세금으로 채워주면 된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을 두고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라는 2가지 입장은 자칫, 소득보장은 국민을 위하고, 재정안정은 국민이 아닌 정부를 위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다. 하지만 팩트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재정 안정이 필요한 것이다.

청년세대가 알아야 할 또다른 팩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납부액을 모아 두는게 아니라 매년 매년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수지타산을 계산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의 생각과 달리, 청년도 잔고 관리를 할 줄 안다.

나가며

국회는 지금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 이데올로기에 취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 인생까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2030들은 국가가 준다는 조삼모사에 속아서 안 된다. 연금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이 바로 본인들이다. 한국 사회가 청년들의 진솔한 의견을 제대로 설문조사할 필요가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부모님을 무책임한 부모로 만들려는 연금개혁

연금연구회 청년세대 김찬혁

대한민국의 부모 세대를 무책임한 부모로 만들려는 연금개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현재 정부안이 그러한 수준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연금 개혁 논의에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자주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 또한 실질적인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큼니다.

지금의 정부안도 우려가 큰데, 현 정부안에서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자고 하는 방안은 자녀 세대를 가난하게 만들며 기성세대를 무책임한 부모로 만들어 버리는 방안입니다.

1. 단기적 조치의 한계와 장기적 재정 불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증가는 겉보기에는 연금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 목표라 하였으나 보험료율을 높이면 현재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키면 연금 수급자의 혜택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연금 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개혁 방안이 실질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세대는 이러한 접근이 잠깐 미루는 식의 유혹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안에서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려는 국회의 방안은 부적절하며 통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2.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결여

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핵심 요소로, 단순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연금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개혁 방안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없이 수치 조정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이러한 조치가 연금 제도의 실질적인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금 기금의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연금 운용수익률을 통하여 기금을 확보하여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방안은 변동성이 큰 투자 비율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로 인해 미래 세대는 더 큰 불안함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과 불공정성

청년 세대는 현재의 연금 제도 개혁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개혁이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높은 보험료율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며, 소득대체율의 증가가 연금 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세대 간 인구분포도를 봤을 때 소득대체율 증가는 불공정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차등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이러한 접근은 결국 청년 세대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가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등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니다. 아이를 낳더라도 지금의 연금 상태를 안겨준 채로 출산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무책임함이 중첩되어 빛이 산처럼 쌓이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4.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의 필요성

연금 제도의 실질적인 개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 계획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OECD 38개 국 중 24개 국에서 자동 조정장치 도입 중입니다. 물가 상승분 정도만 억제하는 자동 조정보다는 더욱 혁신적인 자동 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투명한 재정 관리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소득 보장 강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쌓인 미적립 부채만 해도 1800조가 넘는데, 현 정부안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는 거짓말입니다. 보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결론

현재의 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접근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정부안에서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려는 방안은 미래 세대를 망치며, 기성세대를 무책임한 부모로 만들어 버리는 방안입니다. 단기적인 혜택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개혁다운 개혁을 지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금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부안도 완전하지는 않으나 여기서 더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의 수는 극도로 적어질 것입니다.